

“노동 3권 전면 보장·자본 편파 노동법 바뀌야 손배·가압류 사라진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손배 가압류 노동탄압, 한국 특유 풍토병”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끝장내는 노조법 개정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8월 3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사업주들이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교섭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손배 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삶과 생명까지 앗아가는 극악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쟁의행위 손해가압류 소송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 원청과 대화할 수 없어서 발생한다”라며 “노조법 2조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자 범위를 확장해서,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나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조법 3조에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라면서 “한국 경찰, 검찰, 법원은 쟁의행위를 아주 좁게 해석한다”라고 규탄했다.

김유정 금속법률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라며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에 항거해 분신한 지 20년이 돼가고, 많은 노동자가 경제 파탄, 노조 활동 포기, 자살 등으로 고통받는다. 손배 가압류 노동탄압은 한국 특유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꼬집었다.

김유정 법률원장은 “한국 노동자가 쟁의행위만 하면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원인은 사용자에게 한없이 유리하게 기운 후진적인 법 제도와 법 해석 탓이다”라면서 “노동조건과 고용을 심각히 위협하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근로조건과 무관한 쟁의행위라는 허황한 논리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장은 “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분쟁 상황이 더욱 격화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법원의 자본 편파 행태도 문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법원은 사용자 고의과실로 노동자가 죽고, 노조 파괴

로 인간을 파괴해도 기껏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손해 배상액을 인정한다”라면서 “과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을 들이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쉽게 인정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배상 책임·상황·인적 범위 제한 입법 ▲단체 교섭·쟁의행위 대상·목적 확대 ▲근로조건 사실상 영향력·지배력 행사하는 사람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법 상 노동자 지위 부여 등 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유정 원장은 “헌법 정신과 ILO 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후진적인 노동법령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헌법 기준에 맞도록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확대 보장하는 것이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 입법의 출발이자 필수 조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해배상·가압류 악몽 벗어난 일상 살고 싶다”

경찰, 13년째 쌍용차 파업 노동자 손해 소송 ... ‘국가폭력’에 노동자 극심한 트라우마

“오늘이라도 당장 국가 손해배상 소 취하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국가 손해배상·국가폭력 피해자 채희국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절규했다.

2009년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이 13년째 진행 중이다. 극심한 트라우마로 하루하루 마음의 고통을 겪는 피해 당사자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동, 시민사회, 인권, 종교 등 각계 대표자들이 “13년 동안 저지른 국가 손해 소송과 국가폭력을 경찰 스스로 멈출 기회는 지금뿐이다”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등은 8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경찰청 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 노동자 열여덟 명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피해자인 김정욱, 채희국 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저와 제 동료들의 불안한 현재와 두려운 미래를 알리고자 한다”라며 현장증언 발언을 했다.

김정욱 조합원은 “2009년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공권력 진압이 국가폭력임을 인정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작년에 국회가 국가손배 소 취하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경찰은 소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4년

의 노력과 기다림이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남을까봐 너무도 두렵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정욱 조합원은 “2018년 12월 사회적 합의로 복직한 후 2019년 받은 첫 월급이 가압류 되면서 복직의 희망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의 두려움이 가족의 두려움으로 번지는 순간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라며 “절망의 순간을 또다시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토로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경찰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리 아니다. 소 취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면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듣고자 한다”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유들은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2018년 8월 30일 쌍용차 가족 대책위와 해고 노동자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와 촉구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차장을 면담했다”라면서 “민감통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철회에 관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설명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거스른 채 합의 정신을 묵살하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행했



다”라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헌법 노동 3권이 휴짓조각이 됐다.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정의행위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법안을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국가 손해소송 피해 노동자들은 이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지만, 2009년 옥쇄파업 현장에서 단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간헐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지금이 국가폭력을 스스로 멈출 기회를 직시하길 바란다. 대법원이 판결하면 경찰이 소송을 멈출 기회는 사라진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제기한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소송을 두고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회의는 조사 끝에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당시 민감통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진상조사 결과로 ‘국가 손해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노동자들이 국가폭력 책임자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10년 만에 밝혀진 국가폭력에 대한 법률책임을 묻는 기회를 잃었다. 경찰은 13년째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회가 버티고 금속노조가 받치니 이기더라”

[사람과 현장] 213일 파업, 임금인상·단협 쟁취한 신일정밀지회 - 2편

신일정밀은 산재 다발 사업장이었다. 언제 교체했는지 모를 썩은 절삭유에서 악취가 났다. 팔에 튀는 절삭유로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피부병을 달고 살았다. 쇠를 깎을 때 나오는 칩에 베이거나, 바닥에 떨어진 절삭유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한 달에 한두 건 발생했다. 허리, 다리, 손가락을 다치는 산재사고도 잦았다. 사측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크레인 오작동 역시 내버려 뒀다.

노동자들이 사측에 여러 차례 작업장 환경개선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무시하거나 마스크나 토시를 착용하라는 등 임시방편만 내놨다.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면 공상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를 내고 치료했다. 손재동 전 지회장은 위원장을 맡은 뒤 조합원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 문제를 파고들었다.

함석용 사무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손재동 전 지회장과 회사 관계가 크게 나빠졌다. 임단협까지 걸리니 손재동 지회장을 압박했다”라고 밝혔다. 용석일 지회장은 “손재동이 있으면 회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나가야 회사가 평탄해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현장에 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손재동 위원장이 노동부를 찾아가 ‘산재 다발 사업장인데 왜 교육·감독하러 안 나오나’라며 근로감독관을 쏘아붙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8월 11일 노동부 강릉지청이 현장 안정점검을 시행하고, 수습 건의법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신일정밀, 산재 다발 사업장이었다

2020년 9월 16일 근로감독관들이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일정밀을 다시 방문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

했다. 노동부 강릉지청은 신일정밀 사측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2020년 9월 18일 사측은 “경영철학을 훼손당했다”라며 업체 폐업을 공고했다.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민 아무개 씨는 “법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경영했는데, 노동조합이 근로감독관과 함께 회사를 살피고 다니더니 자신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습 건을 위반한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라며 폐업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민 씨의 말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신일정밀은 이미 2013년 산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당한 전례가 있다. 지회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압박으로 민 씨는 2020년 10월 5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새 대표이사인 최 아무개 씨는 폐업 공고를 철회했다.

용석일 지회장은 “이때부터 회사가 ‘손재동 때문에 회사 말아먹게 생겼다’라며 노조탄압을 본격화했다”라고 밝혔다. 신일정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2021년 노



무사 자격 3년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아무개 씨가 경영고문으로 신일정밀 현장 밀착관리를 시작한 것도 이때 썸이다. 이 씨는 CCTV로 노조 간부를 표적 관찰하고, 징계 협박을 일삼으며 지회를 압박했다.

신일정밀지회 투쟁을 이야기할 때 민 전 대표와 함께 이 노무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씨는 노조파괴 범죄집단 창조컨설팅 인맥으로, 이미 신세계 계열사 노조 설립 원천 차단 전략을 컨설팅한 죄로 직무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었다. 2013년 말 징계를 받은 이 씨를 민 전 대표가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신일정밀의 노동조건은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용석일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이 노무사가 수시로 날리는 경위서 제출 요구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분노했다. 함석용 사무장은 지난 투쟁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이 씨를 만나면 술이라도 사주고 싶다”라며 “이 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지 않으려고 공부했다. 투쟁 방법도 고민하고 당신 덕분이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